 기획재정부		보도자료	
보도일시	2021. 7. 8.(목) 10:00	배포일시	2021. 7. 8.(목) 08:00
담당과장	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장 이지원 (044-215-5740)	담당자	김영웅 사무관 ssuper84@korea.kr 김선영 사무관 ksunny3@korea.kr
	세제실 조세분석과장 최영전 (044-215-4120)		정지운 사무관 jiun.chung@korea.kr
	국고국 국채과 박재진 (044-215-5130)		최시훈 사무관 choisihoon@korea.kr
	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남경철 (044-215-5310)		이승민 사무관 sseung513@korea.kr
	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장 김완수 (044-215-5330)		한재수 사무관 han142857@korea.kr
	공공정책국 윤리경영과장 황병기 (044-215-5620)		이지혜 사무관 jhae22113@korea.kr

「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」 2021년 7월호 (‘21.5월말 기준)

◇ 적극적 재정운용 등을 통한 빠른 경기회복세 및 세수 호조세로 재정수지 적자폭 개선 (전년동기대비 +40.8조원)

- * 시장소득격차 완화 및 분배개선, 성장률 제고, 세수 호조세에 따른 재정건전성 개선의 확장적 재정운용 1석 3조 효과 가시화

◇ 코로나 피해 계층 지원, 고용회복·일자리 창출, 신산업 육성 및 내수·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적극 집행

- * 2분기 연속 소득분배상황(5분위배율) 개선, 3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, 5월 누적 BIG3 산업수출, 1/4분기 벤처투자금액 증가 등에 기여

□ 기획재정부는 「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」 7월호를 발간하여 5월말 기준 재정운용 동향 및 주요 재정사업의 성과 등 발표

□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

- 그간 적극적 재정운용 등에 힘입은 빠른 경제회복과 올해 세수 호조세로 인해 국채 추가발행 없이 이번 ‘21년 2차 추경 편성과 함께 국가채무의 일부 조기상환도 가능했다고 평가하면서,
- 앞으로도 이러한 재정운용의 선순환이 지속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

□ 이어서 안차관은, 지난 1차 추경에 반영된 코로나 피해지원과 취약계층 일자리·생계지원 사업 등의 차질 없는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

○ 1분위 계층을 중심으로 한 소득분배 개선, 취업자 수 증가 등 민생경제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,

○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한 2차 추경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심의·확정되고, 국회 통과 후 신속히 집행하여 추경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임을 밝힘

□ 또한, 조세연에서 기고한 ‘코로나 위기 이후 주요국별 구조개혁 동향 및 시사점’에서 볼 수 있듯,

○ OECD는 각국 정부가 위기 과정에서 취약성이 드러난 구조적 문제 해결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(여성·노인 등) 고용확대, 일자리 질 제고, 직업훈련 강화 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

○ 이는 금번 2차 추경 편성 등 우리정부의 재정운용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고 설명

□ 한편, 7월호의 주요재정 이슈로는,

① Post 코로나 시대 新양극화 대응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운용 방향

② 코로나19 위기와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 추진현황 및 정책과제

③ 코로나19 위기 이후 주요 국가별 구조개혁 동향 및 시사점

④ 코로나19 위기 이후 글로벌 조세정책 동향

⑤ 공공기관 윤리경영 강화방안

⑥ 8대 사회보험 자산운용성과와 과제에 대한 외부전문가 및 정책담당자 기고문을 게재하였음

【'21.5월(누계기준) 재정운용동향】

◇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운용 등을 통한 빠른 경기회복세와 이에 따른 세수 호조세로 재정수지 적자폭 개선

(‘20.5월 누계 △61.3 → ‘21.5월 누계 △20.5조원, +40.8조원)

○ (총수입, 261.4조원) 5월말까지 전년대비 진도율 +12.7%p로, 올해 들어 개선흐름이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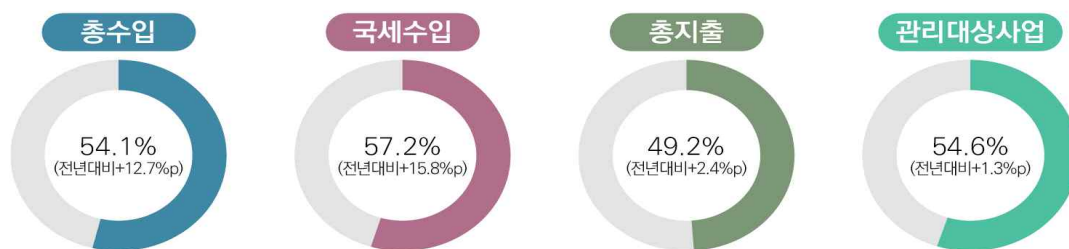
-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, 자산시장 호조, 세정지원 기저효과 및 우발세수로 인해 국세가 전년대비 43.6조원* 증가

* 작년 세정지원 기저효과(+11.1조원) 제외 시 전년대비 +32.5조원 증가 수준

○ (총지출, 281.9조원) 코로나 방역강화 및 피해 지원, 고용안정 등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전년대비 진도율이 2.4%p 증가

○ (재정수지) 재정수지 적자폭은 전년대비 개선(+40.8조원)

주요항목별 진도율(21년 5월말 누계)



□ (총수입, 261.4조원) 소득세·법인세 등 국세, 기금수입 증가

① (국세, 161.8조원) ①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, ②자산시장 호조, ③기저효과·우발세수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15.8%p 증가(+43.6조원)

※ 작년 세정지원 기저효과(+11.1조원) 제외시 전년대비 +32.5조원 수준

- 이월납부: 작년 납부의무세액이 납부유예 조치로 금년으로 이월되어 납부

- 납부유예: 작년 1~5월 납부의무세액이 작년 하반기(6~12월)로 유예되어

비교대상인 작년 1~5월 납부세액 감소

- (①경기회복) 작년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로 인해 법인세(+11.8조원), 부가가치세(+4.3조원) 등이 전년대비 +19조원 증가

* 코스피 상장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(조원 개별기준) : ('19) 56.3 → ('20) 67.5 <+19.8%>
소매판매액지수(전년동월비, %): ('20.12)△2.1 ('21.1)0 (2)8.2 (3)11.1 (4)8.7

- (②자산시장 호조) 부동산·주식시장 등 호조로 양도소득세(+5.9조원), 증권거래세(+2.2조원)·농특세(+1.8조원) 등이 전년대비 +11조원 증가

* 주택매매거래량(만호): ('19.11~'20.4월) 61.0 → ('20.11~'21.4월) 63.0 <+3.3%>
증권거래대금(조원): ('19.12~'20.4월) 1,527 → ('20.12~'21.4월) 3,328 <+118%>

- (③기저효과·우발세수) 작년 세정지원 기저효과(+11.1조원), 상속세 등 우발세수(+2조원)로 전년대비 +14조원 증가

② (세외수입, 14.6조원) 2월, 4월에 각각 年1회 세입조치 되는 한은잉여금(+1.4조원) 및 정부출자수입(+0.3조원) 증가, 부담금(+0.2조원) 증가로 진도율이 전년대비 4.0%p 증가(+2.2조원)

③ (기금수입, 85.0조원) 국민·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(+15.2조원)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9.1%p 증가(+17.4조원)

(조원, %, %p)	'20년						'21년(잠정)				전년동기 대비			
	추경 (A)	결산 (B)	5월 (C)	5월 (누계D)	진도율		1차 추경 (G)	5월 (H)	5월 (누계I)	진도율 (J=I/G)	5월 (H-C)	누계 (I-D)	진도율	
					추경 (E=D/A)	결산 (F=D/B)							추경 (J-E)	결산 (J-F)
□ 총수입	470.7	478.8	31.9	198.2	42.1	41.4	483.0	43.7	261.4	54.1	11.9	63.2	12.0	12.7
◇ 국세수입	279.7	285.5	17.6	118.2	42.3	41.4	282.7	28.4	161.8	57.2	10.8	43.6	15.0	15.8
○ 일반회계	271.9	276.3	17.1	115.5	42.5	41.8	274.0	27.6	156.7	57.2	10.5	41.2	14.7	15.4
- 소득세	88.5	93.1	7.8	36.6	41.4	39.3	89.8	15.0	51.6	57.5	7.2	15.0	16.1	18.2
- 법인세	58.5	55.5	4.4	26.1	44.7	47.0	53.3	8.0	37.9	71.1	3.6	11.8	26.5	24.1
- 부가가치세	64.6	64.9	△0.2	29.2	45.3	45.1	66.7	△0.8	33.6	50.4	△0.6	4.3	5.1	5.3
- 교통세	15.5	13.9	1.1	4.9	31.5	35.0	15.7	1.3	7.6	48.6	0.1	2.7	17.0	13.6
- 관세	7.7	7.1	0.9	3.1	40.1	43.8	8.3	0.7	3.1	37.4	△0.2	0.0	△2.6	△6.4
- 기타	37.2	41.8	3.0	15.6	41.9	37.3	40.2	3.5	22.8	56.7	0.4	7.3	14.9	19.5
○ 특별회계	7.8	9.3	0.5	2.7	34.8	29.4	8.7	0.8	5.1	58.3	0.3	2.4	23.6	28.9
◇ 세외수입	29.1	26.9	1.8	12.4	42.5	46.0	29.3	1.6	14.6	49.9	△0.2	2.2	7.4	4.0
◇ 기금수입	161.9	166.2	12.5	67.6	41.7	40.7	171.0	13.7	85.0	49.7	1.2	17.4	8.0	9.1
(사보기금)	95.8	100.0	8.3	40.5	42.3	40.5	99.5	9.3	55.7	56.0	1.0	15.2	13.8	15.5

□ **(총지출, 281.9조원)** 코로나 방역강화 및 피해지원, 고용안정 등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전년대비 진도율이 2.4%p 증가(+22.4조원)

① (예산)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(+0.9조원) 등 방역강화, 기초연금(+1.0조원) 등 사회안전망강화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0.5%p 증가(+4.3조원)

② (기금)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등 코로나 피해지원, 고용안정지원*, 온누리상품권 발행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집중 집행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5.6%p 증가(+15.9조원)

* 구직급여(+1.0조원), 고용유지지원금(+0.4조원), 내일배움카드(+0.1조원) 등

(조원, %, %p)	'20년						'21년(잠정)				전년동기대비		
	추경 (A)	결산 (B)	5월 (당월 C)	5월 (누계 D)	진도율		1차 추경 (G)	5월 (당월 H)	5월 (누계 I)	진도율 (J=I/G)	증감		진도율 (J-E)
					추경 (E=D/A)	결산 (F=D/B)					5월 (H-C)	누계 (I-D)	
◇ 총지출	554.7	549.9	49.8	259.5	46.8	47.2	572.9	47.9	281.9	49.2	△1.9	22.4	2.4
○ 예산	377.5	374.4	38.5	188.7	50.0	50.4	382.3	35.5	193.0	50.5	△3.0	4.3	0.5
- 일반회계	323.5	320.8	35.2	162.0	50.1	50.5	321.6	28.8	160.3	49.8	△6.3	△1.7	△0.2
- 특별회계	54.0	53.6	3.3	26.8	49.6	50.0	60.8	6.7	32.7	53.8	3.4	5.9	4.2
○ 기금	177.3	175.2	11.3	70.6	39.8	40.3	190.6	12.3	86.5	45.4	1.0	15.9	5.6
(사회보장성기금)	61.2	59.1	4.9	23.8	39.0	40.3	62.9	5.4	27.7	44.0	0.5	3.9	5.1
○ 세입세출외	-	0.4	0.0	0.1	-	24.7	-	0.0	2.3	-	△0.0	2.2	-

* 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

집행관리 대상사업, 343.7조원

- 5월까지 집행률은 54.6%(187.7조원)으로 전년대비 1.3%p 증가
 - 특히, 일자리(68.0%, 9.2조원) 사업은 조기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, 한국판 뉴딜(59.3%, 13.3조원) 사업도 평균(54.6%) 상회

(단위 : 조원, %)	규모	5월 집행(A)		조기집행 목표(B)		진행률(A/B)
			(%)		(%)	
일자리	13.6	9.2	68.0	9.1	67.0	101.1
SOC	54.2	28.5	52.6	33.6	62.0	84.8
생활SOC	11.0	5.7	52.0	7.2	65.5	79.2
한국판 뉴딜	22.5	13.3	59.3	15.7	70.0	84.7

- **(재정수지)** 통합재정수지는 국세 및 세외수입, 기금수입 등 모든 분야의 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적자폭이 개선(+40.8조원) ('20.5월 누계 △61.3 → '21.5월 누계 △20.5조원)

(조원, %, %p)	'20년						'21년(잠정)				전년동기대비		
	추경 (A)	결산 (B)	5월 (당월 C)	5월 (누계 D)	진도율		1차 추경 (G)	5월 (당월 H)	5월 (누계 I)	진도율 (I=I/G)	증감		진도율 (J-E)
					추경 (E=D/A)	결산 (F=D/B)					5월 (H-C)	누계 (I-D)	
◇ 총수입(a)	470.7	478.8	31.9	198.2	42.1	41.4	483.0	43.7	261.4	54.1	11.9	63.2	12.0
◇ 총지출(b)	554.7	549.9	49.8	259.5	46.8	47.2	572.9	47.9	281.9	49.2	△1.9	22.4	2.4
◇ 통합재정수지 (c=a-b)	△84.0	△71.2	△17.9	△61.3			△89.9	△4.1	△20.5		13.8	40.8	
◇ 사회보장성 기금수지(d)	34.6	40.8	3.4	16.6			36.5	3.9	28.0		0.5	11.4	
◇ 관리재정수지 (e=c-d)	△118.6	△112.0	△21.4	△77.9			△126.4	△8.1	△48.5		13.3	29.4	

- **(국가채무)** 1~5월 국고채 발행액은 87.7조원으로, 年 발행한도 (186.3조원)의 47.1%를 평균조달 금리 1.66%로 안정적 소화

* 5월 국가채무 잔액 : 899.8조원(국고채 806.2, 주택채 80.6, 외평채 9.8 등)
(‘21.3월 국회가 의결한 추경예산 기준 전망치 : 938.4조원)

- 외국인·보험사·연기금 등의 전조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, 특히, 외국인은 1~5월 중 15.9조원 규모의 국고채 순투자

* 1~5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(조원) : ('18)+6.9 ('19)+3.7 ('20)+14.1 ('21)+15.9

** 5월 기준 국고채 상장잔액 중 외국인 비중 17.1%

【주요 재정사업 및 성과('21.5월 누계기준)】

- ◇ 취약계층 중심의 코로나 피해지원, 고용 회복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중점 지원하면서,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육성 및 벤처·창업 활성화, 소비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원

- 2분기 연속 국민소득 분배상황 개선, 취업자 3개월 연속 증가, 신산업 수출 증가 및 벤처투자 확대 등에 기여

- **코로나 피해지원 및 사회안전망 투자 강화**

- (코로나 피해지원) '21.1차 추경사업 중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긴급피해 지원 사업 적극 집행

-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감면지원, 영세농어가에 대한 경영 바우처 지급 등 생계안정지원

- (사회안전망) 新 양극화에 대응하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소득·고용안정 집중 지원
 - 지원요건(재산기준, 재지원 제한기한 등)을 완화하여 긴급복지 확대(0.4조원), 생계급여(2.4조원) 및 노인장기요양보험(1.6조원) 지원
 - 근로빈곤층의 탈수급·자립을 위한 자활사업(0.5조원), 장애인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지원(0.1조원)

※ 1/4분기 국민소득의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5분위배율(최상위 20% 평균소득 /최하위 20%평균소득)은 6.30배로 전년비 0.59(배p) 감소하였으며, '20년 4/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분배상황 개선 (1/4분기 가계동향, 기재부)

* 5분위배율: ('20.3/4)5.92<+0.16> (4/4)5.78<△0.05> ('21.1/4)6.30<△0.59>

□ 고용 조기회복 및 직업훈련 지원 확대

- (고용 조기회복) 청년고용 촉진 지원 등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유지, 실직자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역점 추진
 - 청년추가고용장려금(1.0조원), 지역사회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근로 지원사업(0.2조원), 고용창출장려금(0.1조원) 집중 집행

※ 5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+61.9만명 늘어나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상용직 증가폭도 5개월 연속 확대 (5월 고용동향, 기재부)

* 취업자(만명, 전년비) : ('20.12)△62.8 ('21.1)△98.2 (2)△47.3 (3)31.4 (4)65.2 **(5)61.9**

* 상용직 근로자(전년비, 만명) : ('20.12)0.5 ('21.1)3.6 (2)8.2 (3)20.8 (4)31.1 **(5)35.5**

-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(0.7조원), 취약계층(저임금근로자, 예술인 등)의 고용보험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(0.4조원), 구직급여(5.4조원) 등 지원

※ '21.5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,426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만 3천명 증가하면서, 증가폭 개선세 지속 (5월 노동시장 동향, 고용부)

* 가입자수(천명): ('21.1)13,853→ (2)13,992→ (3)14,081→ (4)14,197→ **(5)14,264**

* 가입자수 증감(천명): ('21.1)169→ (2)192→ (3)324→ (4)422→ **(5)443**

- (직업훈련) 실업자·자영업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(0.4조원),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 경감을 위한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(0.1조원) 등 지원

□ 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 지원 및 벤처·창업활성화

- (신산업육성지원) 미래차, 시스템반도체, 바이오 등 BIG3 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, 신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투자 본격화
 - 미래차 보급 확산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(0.7조원), 수소차 보급사업(0.2조원) 등 적극 집행
 -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(0.1조원), 시스템반도체설계지원센터 및 반도체 인프라 구축(130억원) 등 시스템반도체 육성 지원
 - 바이오 의료기술개발(0.3조원), 신약·첨단 의료기기 3대 협업사업*(0.1조원) 등 지원
- * 국가신약개발사업,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,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
- (벤처창업 활성화) 유망 중소벤처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한 혁신 창업사업화 자금(1.5조원), 중소·벤처기업 투자를 위한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(0.8조원) 중점 집행

※ 전기차, 시스템반도체,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이 '20년 대비 크게 증가

* 전기차(5월 누적, 억불) : ('20) 16 → ('21) 24
시스템반도체(5월 누적, 억불) : ('20) 113 → ('21) 145
바이오헬스(5월 누적, 억불) : ('20) 48 → ('21) 63

※ '21.1/4분기 벤처투자 금액이 1.2조원으로 '17년 대비 3배 수준 증가

* 벤처투자금액(1/4분기, 조원) : (17)0.4 (18)0.6 (19)0.8 (20)0.8 (21)1.2

□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력제고 및 생활SOC 투자 지속

- (지역경제 활력제고) 지역사회 소비 촉진을 위해 내수 진작 효과가 큰 농수산·문화·체육·관광 분야 바우처 지급(0.2조원), 지역사랑 상품권 및 온누리 상품권 발행 지원(1.0조원)
- 지역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기업에 시제품 제작, 특허,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(0.1조원)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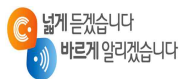
※ 5월 소매판매 전년동월 대비 3.1% 상승 및 소비자 심리지수 6개월 연속 상승*
(5월 산업활동 동향, 통계청)

* 소비자심리지수 : (12)91.2 ('21.1)95.4 (2)97.4 (3)100.5 (4)102.2 (5)105.2 **(6)110.3**

※ 농·축산물구매 바우처를 통해 초등돌봄교실 24만명, 임산부 7.6만명, 저소득 3만 가구, 학교 우유급식 70만명 지원하였고, 스포츠 강좌이용권을 통해 저소득 유청소년 6.5만명 지원

- (생활SOC) 국민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체육센터·도서관 건립(0.3조원),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(0.1조원)등 5월까지 11조원(생활SOC 관리대상규모) 중 5.7조원(52%) 집행

<붙임>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7월호(배포용)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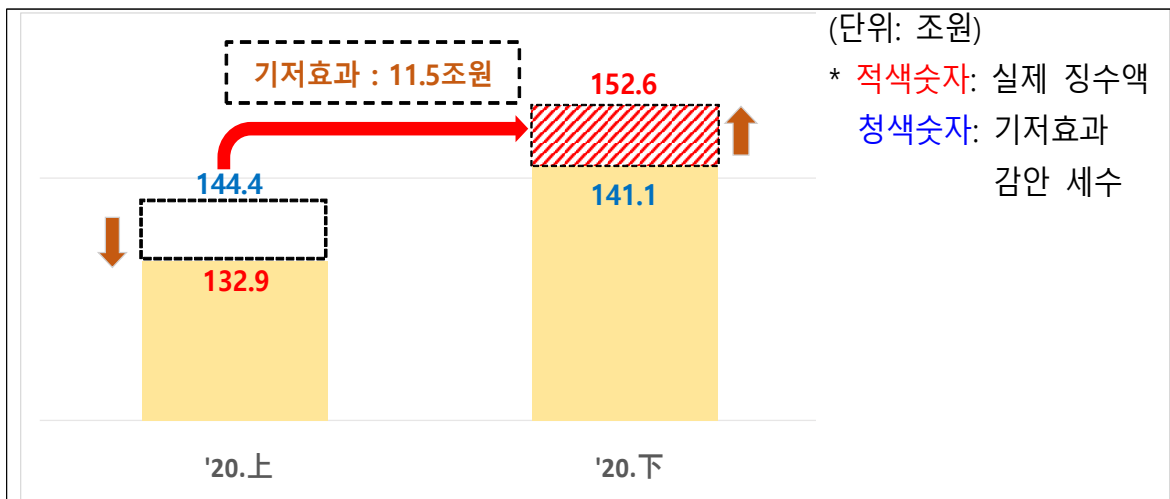
참고1

하반기 세수 고려사항

- ① 세정지원 기저효과 소멸: '20.上 → '20.下 납부유예분 11.5조원
- ② 자산세수 불확실성: '20.下 대비 주택매매·증권거래 안정화 추세

① 세정지원 기저효과 소멸

- 납부유예 기저효과 11.5조원은 하반기 소멸되는 점을 고려
 - 코로나 세정지원을 위해 '20.上에서 '20.下로 11.5조원 규모의 납부유예를 실시 → '20.上 세수가 당초 징수액 대비 감소
 - * 다만 '20.下 세수는 11.5조원 규모만큼 증가하여 '20년 연간세수는 일정
 - 이로 인해 상반기 세수비교시 '20년 납부유예분(11.5조원)만큼 '21.上 세수가 전년대비 더 커 보이는 효과(=“기저효과”)
 - 이러한 “기저효과”는 하반기부터 '20.上 납부유예분이 '20.下에 既납부됨에 따라 점차 소멸



② 자산세수 불확실성

- 양도소득세, 증권거래세 등 자산관련 세목은 일정한 경향성이 없고 자산시장 흐름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 경향
- 주택·증권거래 안정화 추세¹⁾, 시장금리 상승세²⁾ 등 시장동향, 정책변수(예: 증권거래세 인하, 양도세 중과) 등 불확실성 고려

1) 자산거래량 변동 추이(전월대비 증감률, %)

주택매매량 : ('20.10)13.2 (11)25.9 (12)20.1 ('21.1)△35.4 (2)△4.0 (3)17.3 (4)△8.9 (5)4.8

증권거래대금: ('20.10)△33.1 (11)44.8 (12)22.1 ('21.1)19.1 (2)△30.8 (3)△1.1 (4)7.7 (5)△22.2

2) 美 국고채(10년, %, 기말): ('20.12)0.92 ('21.1)1.06 (2)1.43 (3)1.75 (4)1.63 (5)1.58

韓 국고채(10년, %, 기말): ('20.12)1.71 ('21.1)1.77 (2)1.96 (3)2.06 (4)2.13 (5)2.1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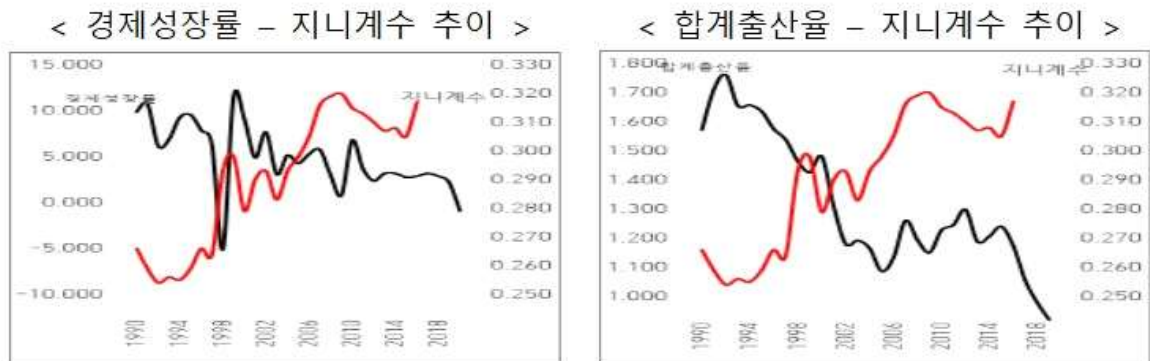
참고2

7월호 주요재정이슈 요약

※ 기고문을 자체 요약한 자료이며, 전체본은 「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7월호」(붙임)에 게재

① POST 코로나 시대 新 양극화 대응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운용 방향(여유진 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)

- (양극화우려) 코로나 극복 국면에서 신양극화에 대한 우려 확대
 - 위기로부터의 회복이 빠른 영역(디지털산업, 전문직, 주주·임대인)과 느린 영역(기존 제조업, 단순노무직, 영세자영업자)간 격차 심화
 -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경제성장률 회복하며 불평등 수반 ('불평등을 수반한 위기극복'의 선례)
 - 지니계수가 지속 상승,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등 경제 회복이 사회적 지속가능성으로 연결되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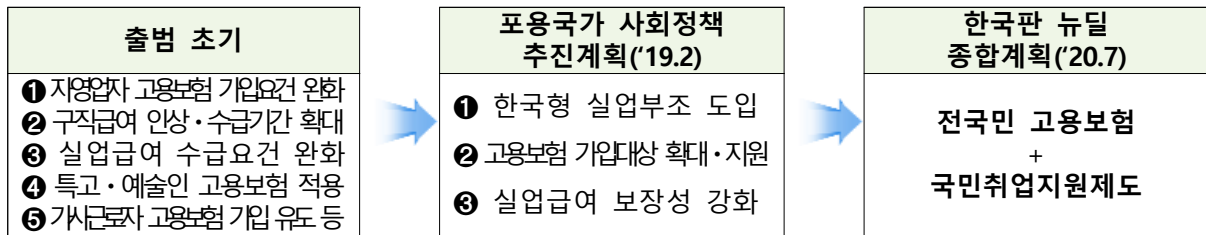


- (재정운용방향) 경제회복이 'K자형 회복'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확충 등 포용적 재정운용 지속 필요
- ① (고용안전망)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·상병수당* 등을 통해 고용취약계층 적시 보호
 - * 업무 외 부상·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경우 소득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
- ② (노후소득보장)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노인 빈곤율에 대응하기 위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
- ③ (학습·취업지원) 코로나19로 인한 교육·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 아동 학습 지원 및 청년 일자리·창업 지원
- ④ (주거안정) 주거급여 확대 및 공공주택 공급 등 주거안정 지원

[2] 코로나19 위기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현황 및 정책과제(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)

1. 논의배경 및 추진현황

- 고용형태·기업규모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현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



-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고용안전망 강화의 두 축인 '전국민 고용보험'과 '국민취업지원제도'에 대한 정책검토가 필요한 시점

<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>

[1단계] 산재보험 적용직종 특고(14개) 중심('21.7~)
▼
[2단계] 플랫폼 기반마련, 대표직종 적용('22.1~)
▼
[3단계] 기타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 직종('22.7~)

< 국민취업지원제도 >

구분	I 유형	II 유형
지원내용	구직수당+취업지원	취업비용+취업지원
연령요건	15~69세	
소득재산요건	있음	없음(일부계층 필요)
취업경험 요건	있음	없음

2. 향후 정책과제

- (전국민 고용보험) 단순한 가입대상 확대를 넘어선 소득기반 보편적 고용보험으로의 전환 기반 마련
- 현재 강조되는 '적용의 보편성'과 함께, '보장수준의 적정성' 및 '재정의 지속가능성'도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
 - * 고용보험은 가입과 급여체제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으로 가입자 기여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운영이 필수적
 - 급여 수급보다 취업이 유리하도록 유인체계를 설계하고, 악의적 반복수급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 필요
- (국민취업지원제도) 보완적 고용안전망으로서 적용 요건에 관한 유연한 접근 필요
- 고용상황을 감안하여 자산·취업경험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자동안정화 역할 수행 장치 마련

③ 코로나 19 이후 주요 국가별 구조개혁 동향 및 시사점
 - 「Going for Growth 2021(OECD, '21.4월)」보고서를 중심으로 -
 (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)

- (구조개혁 동향)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대부분 국가들에서 구조적 문제점*이 부각 →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 시작

* 위기에 취약한 사회안전망·의료제도, 디지털기술에 대한 접근성 격차 등

- 특히 노동·교육 분야에서의 문제점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, 일자리지원·교육인프라 투자 등과 관련된 구조개혁 추진 중

< 주요국 구조개혁 동향 >

미국	· 불필요한 규제감축 추진	독일	· 일자리 및 기업 보호 위한 재정지원
영국	· 일자리지원계획 발표·추진	일본	· 비정규직 보호 위한 법률개정 추진
프랑스	· 사회보험 재정건전성 위한 사회보장부담금 인상 추진	한국	· 상병수당 등 사회안전망 확충 및 디지털·녹색투자 강화(한국형 뉴딜)

- (OECD 권고) 코로나19 회복과정에서 필요한 구조개혁 방향*을 제시하고, 국가별 핵심 정책과제 권고

* ①회복력 및 지속가능성 제고 ②자원 재배분 촉진 및 생산성 향상 ③전환 지원

< 주요국 구조적 문제 및 OECD 권고사항 >

미국	· (문 제) 학생들 간 교육격차가 크고, 실직자에 대한 재정지원 부족 · (권 고) 교육격차 해소 위한 학교개혁 추진,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
영국	· (문 제) 성인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고, 보육비용 부담이 높은 수준 · (권 고) 평생교육지원 및 보육지원 확대
프랑스	· (문 제) 교육격차가 크고, 청년 고용률이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 · (권 고) 취약계층 대상 보육서비스 개발, 직업훈련·취업지원체계 품질 개선
독일	· (문 제) 기업동력이 둔화되고 있으며, 여성의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높음 · (권 고) R&D 세제지원 등 기업 투자인센티브 강화, 유연근무 확대
일본	· (문 제) 성별 임금·고용격차가 크고, 디지털 기술 활용도가 저조 · (권 고) 보육제도 개선 통한 여성근로자 지원, 교육·조세시스템 디지털화
한국	· (문 제) 임금·고용격차 완화 및 사회안전망 보강 필요 · (권 고) 취약계층(여성·노인) 취업지원 확대, 새로운 노동형태(플랫폼노동 등) 대한 보호 강화, 환경규제 및 가격시그널 강화 등

→ 개혁과정에서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우리나라의 경제·사회여건을 감안하여 OECD 권고사항을 점진적으로 적용 필요

4] 코로나19 위기 이후 글로벌 조세정책 동향 (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)

- (법인세) 일부 국가(美, 英)에서 증세동향이 나타나고 있으나, 대부분 국가들은 세제지원 유지·확대 중
- 법인세율 인상을 발표한 미국, 영국의 경우 의회 동의를 필요(美)하거나, '23년 이후 시행예정으로 불확실성 존재(英)

국가	증세	지원
미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인세 인상(21→28%) 및 대기업 최저한세(15%) 적용 ○ 다국적 기업의 국외소득 세율 인상(21%) 및 국외이전 공제 혜택 축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급휴가·병가 및 직원유지 공제 ○ 사업이자 공제한도 확대, 순영업손실 소급공제 한시적 허용 ○ 급여세 공제, 납부기한 연장 등
영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3.4월부터 최고세율 인상(19→25%) (5만 파운드 미만은 19% 유지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규투자('21.4~'23.3) 소득공제 적용 ○ 결손금 소급공제 한시적 허용(3년)
일본	증세 관련 움직임 미확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확대(자본금 1→10억엔) ○ 재택근무 관련 설비투자 세제지원
독일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결손금 소급공제 상한액 인상 ○ 납부기한 연장, 납부 가산세 일부 면제
프랑스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결손금 즉시환급, 기부금 공제율 인상 ○ 납부기한 연장, 중소기업 감면
캐나다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탄소배출 저감 기업 법인세 감면
호주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영상산업 세액공제 확대 ○ 제약산업 특허박스제도(적격특허 소득에 낮은 세율 적용)
중국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부금 소득공제, 적격비용 즉시상각 ○ 결손금 이월공제, 납부기한 연장

- (디지털세) BEPS*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포괄적 이행체계(IF**) 구축되어 논의 중이며, 최근 G7 국가 간 합의 도출

* (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)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

** (Inclusive Framework) BEPS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다자간 회의체(139개국 참여)

- (논의배경) 고정사업장이 없는 디지털 기업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간 합의 도출 필요
- (G7합의 내용) 시장관할국 과세 원칙 + 글로벌 최저한세율(15%)
 - 이에 대해 아일랜드는 현행 법인세율(12.5%) 유지를 밝히며 반발, 미국은 디지털세 적용범위 확대 주장

※ 디지털세 합의안(시장관할국 과세 + 최저한세 15%), IF 총회에서 130개국 지지 확보(7.1일)

5 공공기관 윤리경영 강화방안(황병기 기획재정부 윤리경영과장)

□ (추진배경) 최근 LH직원의 투기 사태 등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공공기관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인식

- 공공기관 직원은 여러 분야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과 책임성이 요구
- 그러나 그간 채용비리,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등 윤리의식 저해 사례로 정책·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 훼손을 야기

⇒ 공공기관 윤리경영 강화방안을 통해 공공부문 신뢰 제고를 유도

□ (주요내용) 공공기관 윤리경영 평가 강화, 중대비위 징계수준 상향, 윤리경영 표준모델 개발 등 윤리경영 문화 정착을 지원

❶ 윤리경영 평가 강화 : '윤리경영' 지표 배점을 확대(현행 : 3점) 하고 중대한 도덕적 해이 발생시 0점 처리 등

❷ 중대비위 징계수준 상향 : 공공기관 직원의 중대 비위행위*에 대해 기관별로 상이한 징계양정을 상향조정

* 음주운전, 성범죄, 금품비위,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등

❸ 윤리경영 표준모델 개발 : 윤리경영 자율진단지표, 모니터링 시스템, 내부성과평가 환류 등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내용의 가이드라인 마련, 기관별 진단보고서 및 개선계획 등 제출

< 공공기관 윤리경영 강화방안 >

	제도개선 방향	주요 내용
1	윤리경영 평가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윤리경영 지표 배점 확대, 평가내용·기준 강화 ▶ 귀책 있는 중대·위법 비위행위에 대해 임원 해임 건의
2	중대비위 제재기준 상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중징계 직원에 대한 성과급,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 ▶ 중대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수준 상향
3	윤리경영 표준모델 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직무·조직별 윤리경영 자율진단지표 등 가이드라인 마련, 기관별 진단보고서 제출·평가

6 8대 사회보험 자산운용 성과와 과제(남경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장)

- (현황)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인 8대 사회보험*은 현재 재원 적립기로 자산규모가 지속 증가 중('18년 714 → '20년 817조원, GDP의 43%)

* 국민연금, 사학연금, 군인연금, 공무원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건강보험, 노인요양보험

- MMF, 채권, 주식, 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군에 포트폴리오 투자
- '20년 코로나19 등 불확실성 확대에도 투자자산 다변화 등 적극적인 시장대응으로 8.6% 수익률 달성(전년대비 +0.3%p)

(참고) 8대 사회보험 자산 포트폴리오

구분	전체 자산	단기 자산	중장기 자산	국내채권	국내주식	해외주식	해외채권	대체투자	기타*
'20년	817.1	14.1	803.0	338.9	145.9	179.4	37.9	97.3	3.7
(비중)	(100.0)	(1.7)	(98.3)	(41.5)	(17.9)	(22.0)	(4.6)	(11.9)	(0.5)

- ⇒ 국민 노후·생활 안정,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력, 미래세대 부담 등 고려시, 사회보험 재원적립기에 적극적 자산증식 필요

- (개선방안)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률 개선을 위해 운용전략 선진화, 자산군 다변화, 아웃소싱 활용 등 필요

- ① (운용전략 선진화) ALM* 도입 등을 통해 중장기 관점에서 자산운용 목표 및 자산배분 적정성 재검토 필요

* 자산부채종합관리 : 장래 부채를 지불할 수 있도록 보험료율, 적립배율, 재원 고갈시점 등을 고려하여 장기 목표수익률 도출

- ② (자산군 다변화) 국내채권*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해외·대체투자 등 적극적인 자산 다변화 필요

* 채권 비중(% , '20년) : 사회보험(45.8), 미국(27.9), 캐나다(22.8), 노르웨이(24.7) 등

※ 특정 자산군에 대한 포트폴리오 편중시 위험 분산효과 반감 및 수익률 저하 우려

- ③ (아웃소싱 활용) 자산운용 조직·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사회보험은 연기금투자플*로의 적극적인 아웃소싱 필요

* 통합운용에 따른 규모의 경제, 재간접 방식의 분산투자 등 구조적 이점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우수한 수익률 달성 중

- (향후계획) 기금운용평가를 통해 ALM 도입 등 운용전략 선진화, 투자자산군 다변화 등 적극적인 자산운용 체계 개선 유도